

국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Policy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um Sized Enterprises in Korea

박복재(Park Bok Jae)

제1저자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장선미(Chang Sun Mi)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시사점 |
| II.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국내 중견기업 현황 | ABSTRACT |
| IV.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 및 정책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활발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고용·수출 등의 평균값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의 한 범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의 중견기업관련 정책을 통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이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견기업, 경쟁력, 정책, 미국, 독일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기업 구조가 경제위기에 취약함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유럽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독일 경제의 축이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들 중견기업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2,505개로(관계기업¹⁾ 제외), 전년(2011년 기준 1,422개사)대비 76.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그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별도의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도 그리 많지 않다²⁾. 따라서 각 국가에서 중견기업의 경제적 위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또한 국가간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독일의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가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독일은 중소기업의 범주내에서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존의 재정위기 때에도 탄탄한 버팀목이 되었던 중견기업(히든챔피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나 기준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법의 개정(2011.3)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1.7)을 통해 중견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발전법(제10조의 2)에 정의된 중견기업의 기본개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과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은 제외된다. 이후 2012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견기업 현황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 1) 타 기업 지분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종업원·매출액 등을 지배·종속기업간 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하는 제도('11 적용)
- 2) 공식적으로 중견기업의 분류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 대만, 프랑스, 우리나라 등이며, 독일과 중국은 유사한 분류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중견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준이나 정의가 정립된 시기가 최근인 관계로 관련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과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양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이 2011년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제시된 후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기 이전에도 중견기업연합회나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져왔다. 2011년 이전의 연구들은 대체로 중견기업의 범주에 드는 기업의 기준이나 법적 근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기업군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5), 김종선(2006), 이광호(2007), 고성진·김갑수(2009), 김한준·장선미·김갑수(2007) 등). 이후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이 정립된 이후의 연구들은 법적기준에 입각한 중견기업의 최근 현황과 정부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과 특정국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학노·최혁준(2013), 김영신(2012), 박상문(2011, 2012), 박청원(2013), 강철구(2012), 조병선(2013) 등).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5)는 기업은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중견기업을 종업원 수 300명~999명, 매출액 400억원 이상~1조 미만으로 정의함이 적합함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견기업은 많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점을 살리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과 기술경쟁력, 해외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선(2006)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5)의 조사결과와 엄미정(2005)의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현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하였다. 중견기업의 매출액 규모별로 기술혁신활동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커지면 오히려 R&D집약

도가 감소하는 역U자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혁신을 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자금문제보다는 기술혁신역량이나 협력대상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광호(2007)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부품소재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단계별, 산업별 R&D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가치사슬단계별로는 장비기업의 R&D집약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재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중핵기업의 R&D집약도가 가장 높고 소재 분야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김한준·장선미·김갑수(2007)는 국내 기술혁신기업들 중 중견기업군을 추출하고 이들 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술혁신 중견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특히 부품소재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프로그램의 개발과 중견기업 R&D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역량 보유 중소기업에 고급, 전문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디자인이나 브랜드 혁신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고성진·김갑수(2009)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 DB를 활용하여 중견기업의 R&D실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R&D투자의 애로요인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R&D 투자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국내 중견기업군에는 일반적으로 R&D투자를 많이 하는 부품업체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며, 앞서 이광호(2007)와 김한준 외(2007)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견기업군에 속하는 소재기업들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R&D투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R&D투자비중이 높은 기술혁신적 부품업체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군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견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대규모 소재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비혁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2011년 산발법상 중견기업 법적 기준 제정 이전의 연구들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각자의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연구들은 2011년 이후의 연구들로 법적기준에 입각하여 중견기업 범주에 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연구는 주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문(2011, 2012)은 개정된 산발법상 중견기업의 정의에 따라 중견기업을 분류하고 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일반적인 현황분석 위주로 주요 변수들이 기업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견기업의 성장요인 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박상문(2010)에서는 중견기업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로 성공요인을 분석하는데 수요대기업 동반성장형은 신기술개발과 원가절반, 글로벌 시장 개척형은 적기 제품개발 역량과 독자브랜드 구축, 특화 제품 전문형은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 마케팅 역량이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김영신(2012)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우리정부의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조세와 규제 등에 있어 성장 단계별 유인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박청원(2013) 1,30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중견기업의 주요특성 및 경영성과를 기초로 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 면에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력 및 수익성이 기업의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률이 경영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혁신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매출액의 증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춘(2013)은 중소·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이들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R&D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R&D지원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R&D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학노·최혁준(2013)은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중견기업의 R&D지원 강화와 업종별 지원정책 차별화, 시장 선도적 전문 업종 육성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정국가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로 강철구(2012)는 일본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 중견기업에 특정한 성장지원 정책은 없으나 고용비중, 산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질적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중견기업들은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조병선(2013)은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독일의 중견기업의 성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독일 중견기업의 성장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유한 사업 분야에 집중과 활발한 혁신과 R&D활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견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준이나 정의가 정립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관계로 관련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Ⅲ. 국내 중견기업 현황 및 정책

1. 중견기업 현황³⁾

1) 연도별 추이

2012년 말 기준 전체 관계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은 총 3,436개로 전년(2,743개) 대비 25.3% 증가하였다. 관계기업⁴⁾을 제외한 일반 중견기업만을 보면, 2012년 기준 총 2,505개로 전년대비 1,083개(7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정책과 2012년 신규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10→'11년 131개 증가.) 전체기업체 수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0.04%에서 2012년 0.08%로 확대되었다.

〈표 1〉 중견기업 수

(단위 : 개,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전체 중견기업 | 970 | 1,172 | 1,146 | 2,187 | 2,743 | 3,436 |
| 일반 중견기업 | 970 | 1,172 | 1,146 | 1,291 | 1,422 | 2,505 |
| 관계기업 | - | - | - | 896 | 1,321 | 931 |

3) 중견기업과 관련된 일반현황자료는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3.12.19.), '2013년 중견기업 현황 발표(2012년 말 기준)'을 활용함

4)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중견기업 정의에 따른 경우, 관계기업도 중견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지배기업과 합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의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중기기본법시행령 제2조, '11년 시행)하고 있다.

관계기업제도는 기업 쪼개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중견기업 정책 목표에 부적합하고, 기업 규모가 작아, 재무정보 파악이 곤란하거나 고용·수출 등이 현저히 작아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의 중견기업분석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 매출 현황

중견기업의 매출총액은 560조원에 달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2·3위의 매출액을 합한 규모(569.6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며⁵⁾, 2011년에 비해 50.1%(18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누어 매출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1.4%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기업 수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9%가량 낮았으나 매출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22.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에 소규모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수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표 2〉 중견기업 업종별 매출 현황

(단위 : 조원,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전 산 업 | 257 | 367 | 306 | 350 | 373 | 560 |
| 제 조 업 | 155 | 229 | 181 | 220 | 234 | 344 |
| 비제조업 | 102 | 139 | 125 | 130 | 139 | 216 |

3) 중견기업 수출현황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수출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수출액은 703.3억불(제조 612.1, 87%, 비제조 91.2, 13%)로 2011년 대비(603.3억불)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9%에서 2012년 12.8%로 2%가량 확대되었다⁶⁾.

5) ①삼성 256.2조원, ②에스케이 157.9조원, ③현대자동차 155.5조원
6) 관세청 수출입통계 기준 수출액은 2011년 5,552억불, 2012년 5,481억불임.

〈표 3〉 중견기업 수출 현황

(단위: 억불,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전 산 업 | 479.8 | 648.7 | 402.2 | 591.9 | 603.3 | 703.3 |
| 제 조 업 | 442.5 | 601.0 | 386.8 | 583.2 | 561.9 | 612.1 |
| 비제조업 | 37.3 | 47.7 | 15.4 | 8.7 | 41.4 | 91.2 |

수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1,388개(55.4%)이며(제조업 935개, 82%), 1백만불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은 434개(31.3%)이며, 1억불 이상 수출기업은 170개(제조 146, 비제조 24)로 나타났다.

〈표 4〉 중견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개)

| 구분 | 수출 | | | | | | | | |
|-------|-------|------------|--------------|--------------|--------------|--------------|-------------|-----------|-------|
| | 없음 | 1백만불 미만 | 1백만~ 5백만불 | 5백만~ 1천만불 | 1천만~ 3천만불 | 3천만~ 5천만불 | 5천만~ 1억불 | 1억불 이상 | 합 계 |
| 전 산 업 | 1,117 | 434 | 200 | 111 | 204 | 112 | 157 | 170 | 2,505 |
| 제 조 업 | 205 | 196 | 118 | 81 | 161 | 97 | 136 | 146 | 1,140 |
| 비제조업 | 912 | 238 | 82 | 30 | 43 | 15 | 21 | 24 | 1,365 |

4) 중견기업 R&D현황

다음으로 중견기업의 R&D집약도를 살펴보았다. 매출액대비 R&D지출액으로 계산되는 R&D집약도는 1.1%(제조 1.4%, 비제조 0.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R&D집약도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이 매출액 상승에 비해 R&D에 대한 투자가 부진함을 의미한다.

〈표 5〉 중견기업 R&D집약도

(단위 : %)

|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전 산 업 | 1.50 | 1.25 | 1.43 | 1.37 | 1.29 | 1.10 |
| 제 조 업 | 1.75 | 1.39 | 1.62 | 1.52 | 1.64 | 1.40 |
| 비제조업 | 1.11 | 1.02 | 1.16 | 1.12 | 0.74 | 0.63 |

이상의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중견기업 현황을 보면, 기업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고용·수출 등의 평균값이 2011년에 비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이 다수 유입됨에 따라, 평균지표값 동반 하락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매출·고용·수출 등 평균 지표값 하락은 개별 중견기업의 역량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R&D집약도의 하락은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의 하락을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 중견기업 지원정책

국내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은 2011년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법제화되었다. 그 전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현행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크게 자금 및 금융, 창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여성 및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창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기업협력증진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는 크게 활용 대상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국한하는 세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세제, 그리고 중소기업도 활용대상에 포함되는 세제 등이 있다⁷⁾. 2011년 기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13개 부처 241개 사업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기획재정부, 2011).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신설 또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상생보증펀드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세액공제제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에도 세제, 자금지원 등 각 정부부처에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되었다.

7) 김영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KDI, 2012, pp.260-306.

IV.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현황 및 정책

1. 중견기업현황⁸⁾

1) 미국

미국은 중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은 없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각 산업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견기업’의 정의가 따로 없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가 500~999명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0년 기준 미국의 중견기업(종업원 수 500~999명) 수는 8,717개사로 미국 내 전체 업체 수(5,106,203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에 불과하다⁹⁾. 중견기업의 주요업종은 서비스업이 60%가량을 차지하고, 제조업의 비중은 19%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5,823,043명으로 미국 내 총 고용인원(111,175,010명)의 약 5.2%를 고용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중견기업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

2) 독일

독일도 역시 중견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Mittelstand(중기업)’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양적 기준에서 독일의 중소기업(KMU: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은 종업원 수 500명 미만·매출 5,000만유로의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종업원 수 10명 미만·매출 100만유로의 소기업과 종업원 수 500명 미만·매출 5,000만유로의 중기업이 포함된다.

독일 내 중소기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IfM(중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독일내 중기업의 수는 약 44만개로 전체 기업 약 362만개의 11.8%이며, 이들 중기업의 고용인원은 총 1,184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2,568만명)의 46.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업의 주요 업종은 유통업/차량정비 및 보수업으로 전체의 27.3%(116,37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공업 16.4%(69,842개), 건설업 10.6%(45,135개)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8) 주요국의 중견기업 현황 자료는 Kotra(2012),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Global Market Report, 12-069를 활용함.

9) 2014년 1월 현재 미국의 기업데이터에 관한 최신 통계자료는 U.S. Census Bureau의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2010임.

10) 기업규모별 매출관련 최근 통계는 U.S. Census Bureau의 Statistics of U.S. Business 2007임.

로 중기업의 매출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 중기업의 총매출은 1조5,940억 유로로 전체 기업의 총매출 5조 4,938억 유로의 약 29.0%를 차지하여 고용비중에 비해서는 낮으나 독일내 중기업의 매출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정책

1) 미국의 중견 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

미국에는 중견기업만은 따로 육성 및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글로벌화 지원정책들로는 수출금융(Export Financing)지원, 운영자금(Working Capital)지원, 전용 수출보험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규모별로 수출입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기준 미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중업원 수 미확인 업체 포함)이며, 수입에서 비중은 31.6%에 달한다, 수출입 업체의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모두 약 97%이상으로 수출입업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미국 기업의 수출입 현황

| 중업원 수 | 수출액 (백만달러) | 비중(%) | 수입금액 (백만달러) | 비중(%) | 수출업체 수 비중(%) | 수입업체수 비중(%) |
|--------|---------------|-------|----------------|-------|-----------------|----------------|
| 미확인 | 106,751 | 9.4 | 123,616 | 7.4 | 38.3 | 33.0 |
| 1~499명 | 276,662 | 24.3 | 407,724 | 24.2 | 59.5 | 64.2 |
| 500명이상 | 754,222 | 66.3 | 1,148,183 | 68.4 | 2.2 | 2.8 |
| 합계 | 1,137,635 | 100.0 | 1,679,523 | 100.0 | 100.0 | 100.0 |

자료: A Profile of U.S. Importing and Exporting Companies, 2009-2010' U.S. Census Bureau

미국의 수출지원 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별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3,5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규모도 2010년

50억달러에서 2015년까지 90억달러 규모로 약 2배정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수출지원활동으로 수출유관부터간 협력을 통해 미국 업체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확대, 차세대 신흥시장 진출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 주관으로 주요 국가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경제외교의 확대 및 해외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수출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 수출금융지원을 들 수 있다. 미국정부는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데 2012년 5월까지 총 18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수출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Working capital)지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청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운영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제공을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제공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가입절차 및 부보범위를 대폭 간소화시킨 Express Insurance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2010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내 개초 주요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무역통상 관련 정부기관이 상무부, 중소기업청, 무역대표부,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 등 6개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Business USA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2) 독일의 중견기업 지원정책

독일은 중견기업에 대한 R&D 자금지원 등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정부차원 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지원이 다소 우대되는 상황이며, 2003년 이래 독일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강한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능력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투자지원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창업·R&D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동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독일 정부는 정부차원의 신 혁신기술 프로젝트 등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지원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기업 육성정책을 토대로 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AGA(Auslands Geschaefths Absicherung de Bundesrepublik Deutschland)라는 기관에서 독일기업의 해외 수출 및 투자진출에 대한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직접투자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투자개발공사(DEG)는 독일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시 금융지원·장기대출, 컨설팅, 지분참여 및 보증 등-을 하고 있다.

독일 기업의 글로벌화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독일 내 총 수출기업은 약 35만개인데 이중 중기업의 비중은 약 39.1%인 134,869개로 조사되었다(중소기업연구소(ifm)).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의 비중은 총기업의 9.8% 수준인데 중기업의 경우 3.7%로 수출중기업의 비중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총 수출에서 중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3%로 수출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7〉 독일 기업의 수출현황

| 구분 | 전체 | 중소기업(비중) | 중기업(비중) |
|--------------|---------|----------------|----------------|
| 수출기업 수(개, %) | 353,259 | 344,855(97.6%) | 134,869(39.1%) |
| 수출기업 비중 | 9.8% | 9.5% | 3.7% |
| 수출(억 유로) | 9,646 | 1,861(19.3%) | 1,761(18.3%) |

자료: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수출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기계부품, 화학가공제, 전기전자 부품 등 주요 기간산업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경우 선진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2012년 독일 상공회의소(DIHK)의 조사결과 독일 중견기업의 44%가 해외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투자 목표국은 중국 등 아시아국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차원의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기관은 AGA(Auslands Geschaefths Absicherung der Bundesrepublik Deuthchland)과 독일투자개발공사(DEG: Deutsche Investitions-und Entwicklungsgesellschaft)를 들 수 있다. AGA는 독일기업의 해외 수출 및 투자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투자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직접투자보증제도는 1949년 이래 독일 정부가 수출관련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지불중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수출 시용보증제도로 이는 독일기

업의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에 유형 및 무형의 지분 투자시 투자금액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인 컨설팅 서비스, 환경 요소와 지급에 관한 정보, 개별국가별 지원 방법과 관련한 정보 무료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투자개발공사(DEG)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개도국 투자 진출시 금융지원을 하는데 이는 투자기업을 위해 신용 있는 재정을 제공하고, 투자진출이 개도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진출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농업, 제조업 등을 포함해 서비스, 인프라 등 제반 경제 분야에 걸쳐 장기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정부는 2010년부터 중견기업의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3월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월드클래스 300기업 1차 선정·지원(30개사), 그리고 2012년 8월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등 본격적인 중견기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 정책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013.9),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안(2013.12),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 지원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미국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의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의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중간 허리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견기업의 주요 성장지표에 해당하는 매출고용·수출 등의 평균값이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R&D집약도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미국과 독일의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중견기업만을 따로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범주 안에서 정부차원에서 폭넓은 글로벌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성공적일 글로벌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두 국가 모두에서 정부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및 기업 구조는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중소기업 육성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간 허리층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과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중소기업을 졸업할 유인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 및 유사 중복의 문제이다. 중소기업 자원지원은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많으며 이에 실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지나친 편중과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 중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 중소기업관련 사업조정으로 인해 예산이 감소된다면 부처간 정보공유의 유인은 약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장과 축진의 유인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업지원은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을 위한 기업평가가 정량적인 실적기준에 치우쳐 있는 까닭에 중소기업 관련 지원이 10년 이상 안정기에 있는 기업위주이거나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대상으로 이루어져있다(기획재정부, 2011). 즉 중간단계인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계기업이 계속 남게 함으로써 신생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정상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설법인 수가 퇴출기업에 비해 약 30배 이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수가 많다보니 중소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특별한 기술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대체로 가격경쟁을 펼치다보니 영업이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즉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산업내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겠다.

첫째,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글로벌화·수출이나 직접투자 등·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금융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R&D와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이 열위인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아이디어에 바탕한 틈새시장 공략이 주효하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술은 활용한 틈새산업 발굴을 통해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들의 R&D활동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양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둘째, 중견기업 효율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 및 제도의 개선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이유로 성장을 기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그 규모에 맞는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신생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중견기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법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상 제시된 중견기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범위 이상이라는 양적기준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예외적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중견기업의 해당 여부의 판단이 쉽지도 않다. 단순히 중견기업의 수만을 늘이는 양적 확대 정책이 목표가 아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중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인 독일과 미국의 중견기업 현황과 육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범위에 있어 미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최근 급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중견기업에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적 관련성 면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연구의 방법에 있어 주로 문헌과 통계자료에 의존한 연구로 해당 국가의 중견기업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보완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2011년 제 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2011. 11. 22
- 김귀옥, 한국 수출기업의 혁신활동에 따른 영향요인과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김석현·정현주,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 김수동, 「한국 산업재산권 출원의 결정요인」,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영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KDI, 2012.
- 김태기·장선미, “한국 제조업에서 기업의 특허가 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 「경제학연구」, 제53권 3호, 한국경제학회, 2005
- 김한주·황윤섭, “연구개발 특성이 기업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화된 한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 9권 제4호, 2007.
- 성태경,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결정요인: 자원기반 관점에서 본 탐색적 연구”, 「기술혁신연구」, 제10권 제2호,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
- 이동석·정락채, “우리나라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평가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4권, 제2호, 2008.
- 이병현·강원진·박상문,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 기술혁신 및 성과 차이와 정책적 시사점”, 「벤처경영연구」, 제11권, 제1호, 2008.
- 장선미·김한준, 기업의 혁신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조업 기술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연구」, 제25권 3호, 산업개발연구소, 2009.
- 조성표·이연희·박선영·배정희, “R&D Scoreboard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와 성과의 연관성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0권 제1호,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
- 한국신용평가정보원(주), KISVALUE(www.kisvalue.com)
- Bound, J., C. Cumminx, Z. Griliches, B. H. Hall, and A. Jaffe, “Who Does R&D and Who Patents?”, In: Zvi Griliches, (ed) R&D, patents and productiv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4.
- Branch, B.,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ts Relation to Sales Growth,”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 25, No. 2, 1973.
- Crepon, B., E. Duguet, and J. Maissner, “Research,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 Econometric Analysis at the Firm Level,”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6696, 1998.

- Griliches, Z., "Patent Statistics and Economic Indicator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8, 1990.
- Hall, B. H., and R. H. Ziedonis, "The Patent Paradox Revisited: Firm Strategy and Patenting in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1979-1995,"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No. 1, 2001.
- Jaffe, A. B.(1986),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s of R&D: Evicence from Firms' Patents, Profits, and Market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5.
- Kim, Y. and S. Ha,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Change in SMEs: The Korean Electronic Parts Industry 1990-2000," Working Paper, KAIST, 2005.
- Morbey, G. K., "R&D: Its Relationship to Company Performan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5, Issue 3, 1988.
- Pakes, A. and Z. Griliches, "Patents and R&D at the Firm Level: A First Look," In: Zvi Griliches, (ed) *R&D, patents and productiv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4.
- Parasuraman, A. and L. M., Zern, "R&D's Relation in Profit and Sales," *Research Management*, Jan-Feb, 1983.
- Sakakibara, M. and L. Bransterrer, "Do Stronger Patents Induce More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1988 Japanese Patent Law Reform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No. 1, 2001.

ABSTRACT

A Policy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um Sized Enterprises in Korea

Park Bok Jae* · Chang Sun Mi**

This study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Germany Recently the number of Korean Medium Sized Enterprises is highly increased. But the average sales, employment, and export which can be the indicator for growth were decreased, particularly the decrease of R&D intensity was remarkable. There are 3 policies suggestions necessary to accelerate growth of Medium Sized Enterprises. First, reform the system for Medium Sized Enterprises to grow their activity. There need to direct support as well as arrange governmental regulation. Second, need to increase R&D aid for enhance innovative competence of MSE. Lone-term continuous support for R&D is most import for promoting competitive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lastly, for successful supporting policy there need to modify the comprehensive criterion for present Medium Sized Enterprises.

Key Words : MSE(Medium Sized Enterprise), Competitiveness, Major Countries, Policy

* 1st author,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Wonkwang University